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브라질

Federative Republic of Brazil

2019년12월9일 | 조사역(G3) 박지현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동향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8,516천 km ² 	인구 약 2.1억 명 (2019 ^f)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대외정책 실리주의 
GDP 18,470억 달러 (2019 ^f) 	1인당GDP 8,797달러 (2019 ^f) 	통화단위 Real (BRL) 	환율(U\$기준) 3.90 (2019 ^f) 

- 브라질은 남미 대륙 중동부에 위치(남미 대륙의 47% 차지)하며, 에콰도르와 칠레를 제외한 남아메리카의 모든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국토면적은 한반도의 37배 수준으로 세계 제5위이며, 2018년 기준 인구는 약 209백만 명으로 세계 제5위, GDP는 18,678억 달러로 세계 제9위 규모의 경제대국임.
- 브라질은 철광석, 원유, 농축산물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으로, 원자재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극우로 분류되는 보우소나루(Bolsonaro) 대통령은 2019년 1월 취임 이후 친시장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최우선 과제였던 연금개혁안은 2019년 10월 의회에서 최종 통과되었으며, 세제 개혁, 재정 건전화, 공기업 민영화 등의 정책도 순차적으로 추진 중임.
- 브라질은 심각한 소득 불평등, 만연한 부정부패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 등 사회불안 요소가 잠재된 가운데, 최근 칠레, 볼리비아 등 인접국에서의 대규모 시위 사태가 본 정권의 친시장 정책에 따른 불만 등과 맞물려 사회갈등을 촉발할 위험이 있음.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59. 10. 31 수교 (북한과는 2001. 3. 9)

주요협정 무역협정 ('63), 문화협정 ('67), 이중과세방지협정 ('91, 개정 '18), 과학·기술협력협정 ('92), 항공협정 ('95), 관광협력협정 ('97), 범죄인인도조약 ('02), 사증면제협정 ('02), 원자력협력협정 ('05), 형사사법공조조약 ('06), 국방협력협정 ('08), 사회보장협정 ('15)

교역규모

(단위 : 천 달러)

구분	2016	2017	2018	주요품목
수 출	4,456,543	5,505,232	4,883,693	반도체,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수 입	3,444,723	3,702,337	3,908,060	철광, 식물성물질, 제지원료

해외직접투자현황('19.6월말 누계, 총투자기준) 294건, 8,265,699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f
경제성장률	-3.6	-3.3	1.1	1.1	0.9
소비자물가상승률	9.0	8.7	3.4	3.7	3.8
재정수지/GDP	-10.3	-9.0	-7.9	-7.2	-7.5

자료: IMF, EIU

최악의 경기침체 이후 완만한 회복세

- 브라질 경제는 수출의 절반 이상¹⁾을 차지하는 원자재(철광석, 원유 등) 및 농축산물(대두, 커피, 육류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원자재 및 농산물의 국제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2015~16년에는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에 따른 수출 감소, 민간 소비 위축, 부정부패 스캔들에 따른 기업 경영여건 및 투자심리 악화, 대통령 탄핵 등에 따른 정치 불안 등으로 2년 연속 -3%대를 기록하면서 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²⁾를 경험하였으나, 2017년에는 원자재 국제가격 상승, 투자 회복, 개혁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1.1%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였음.
- 2018년에는 트럭 운송노동자 파업 여파, 주요 수출국인 아르헨티나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경제개혁 추진 불투명에 따른 투자 저조 및 대선 관련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 등으로 1.1% 성장에 그쳤음.
- 전임 정권의 재정건전화 정책에 따른 유가보조금 중단 등으로 유가(디젤)가 급등하자 유가 인하를 요구하며 트럭 노동자들이 10일 간 파업하여 물류 대란을 초래함. 정부는 피해규모를 150억 헤알(GDP의 약 0.2%), 브라질 재계는 750억 헤알로 추산하는 등 파업 여파는 상당한 것으로 파악됨.
- 한편, IMF는 GDP 대비 총투자율이 과거 20% 수준에서 마이너스 성장 이후 15%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투자 부진도 더딘 회복세의 원인으로 지적함.

브라질의 총투자율 추이(%)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투자율	21.9	21.9	21.5	21.8	20.6	17.4	15.0	15.0	15.4

자료 : IMF

1) 2018년 10대 수출품목(총수출액 대비 비중, %) : 대두류(14.0), 원유(12.4), 철광석(9.9), 기계류(6.2), 육류(5.5), 차량(5.3), 철강(4.9), 목재펄프(3.5), 동물사료(3.0), 원당 및 가공식품(2.8)
 2) IMF에 의하면 브라질 경제가 1980년 이래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이 시기가 사상 최초임.

2019년 경제성장률은 연초 예상보다 낮은 0.9%로 전망

- 올해 1월 출범한 보우소나루 신임 정권의 연금제 개혁, 재정건전화, 공기업 민영화 등 시장친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내수 확대 등을 근거로 IMF는 2.1% 성장을 전망(19.4월)하였음.
- 그러나 1월 발레(Vale)사 소유 브루마지뉴 광산댐 붕괴 사태에 따른 철광석 수출 감소, 글로벌 경기 침체 및 인접국인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 지속에 따른 교역 위축, 연금제 등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1분기 및 2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각각 -0.1%, 0.4%를 기록함.
- 한편, 하반기에는 광물 수출 회복, 연금제 개혁 통과 및 세제 개혁 등 추가적인 경제 개혁 추진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 회복 가능성이 기대되었으나, 상반기 경기 부진의 여파, 아르헨티나 디폴트 가능성 등 대외적 위험요소가 상존하여 금년 성장률은 0.9%에 그칠 전망이다(IMF는 7월 0.8%로 하향 조정 후 10월에 0.9%로 소폭 상향 조정).
- 단, 연금제도 개편에 따른 효과 및 세제 개편, 공기업 민영화 등 추가 구조개혁(안)은 중장기적으로 브라질 경제의 체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민간투자, 민간소비 진작을 위한 단기 모멘텀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경제성장률은 당분간 완만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근로자들의 퇴직적립금(FGTS) 인출 허용 방식을 통해 약 400억 헤알(GDP의 0.6%)에 해당하는 유동성을 2019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급할 예정임.

2019년 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 목표치 하회 전망

- 브라질 중앙은행은 연평균 목표 물가수준을 2018년 4.5%, 2019년 4.25%(허용한도 $\pm 1.5\%$)에서 관리하고 있음. 2018년 5월 트럭 운송자 파업 여파로 인한 물류 대란 및 이에 따른 일시적 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동월 이후 물가상승률은 허용한도 범위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음.
- 더딘 경기회복세, 내수 부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유휴 생산시설 존재 등 물가하방 압력이 높은 가운데, 1~9월 누적 물가상승률이 2.49%, 9월 기준 12개월 물가상승률이 2.89%로 집계되는 등 최근 물가수준이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하회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9년 물가상승률은 EIU 기준 3.8%, 중앙은행 기준 3.3%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브라질의 목표 물가수준 및 연간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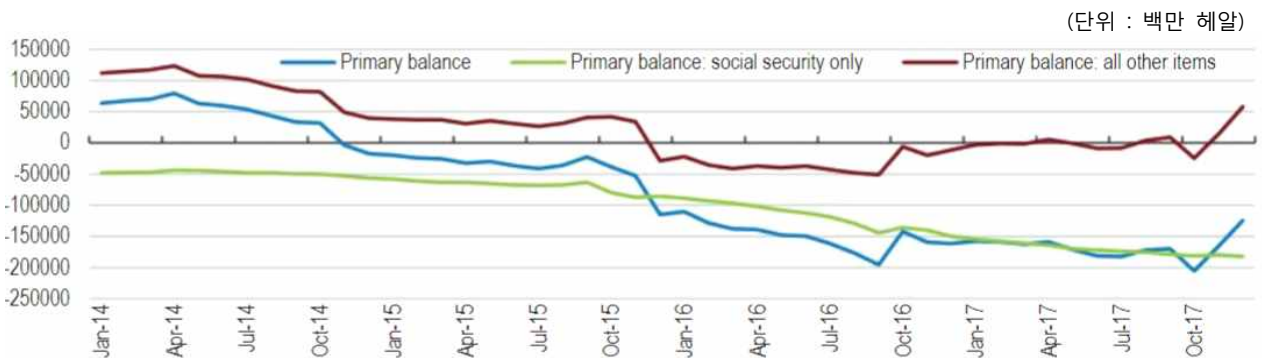
자료 : 브라질 중앙은행

- 한편, 지난 7월 브라질 중앙은행은 2018년 3월 금리 인하 조치 이후 처음으로 기준금리(Selic)를 기존 6.50%에서 6.00%로, 지난 9월 5.50%로, 10월 5.00%로 3차례 연속 각 50bps 인하하여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음. 이는 미국 등 주요국이 통화 완화 기조로 돌아선 가운데, 자국 물가수준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경기 진작을 위한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³⁾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과도한 재정수지 적자 해소 관건

- 브라질은 원자재 국제가격 하락이 시작된 2014년부터 세수 감소, 연금 지급 등 재정지출 확대 영향으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여 2015~16년 중 GDP 대비 약 -10%의 대규모 재정 적자를 기록하였음.
- 이에 정부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2016년 12월 정부지출 상한법(20년 간 재정지출을 전년도 물가 상승률 이내로 제한)을 제정·시행 중이며, 원자재 국제가격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재정 긴축 노력 등에 힘입어 금년도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7.5%(IMF)로 전망됨.
- 한편,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은 2018년 88%에 달하였으며, IMF는 기초재정수지(2018년 -1.7%)가 최소 1.1%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2024년까지 공공부채가 9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OECD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보장지출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는 2017년 4분기를 기점으로 흑자 전환을 하였으나, 사회보장지출 포함 시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지출 관련 제도(연금제도 등) 개편이 반드시 필요함.
- 현재 정부지출의 약 90%는 법 개정 없이는 용도를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 성격의 지출인 데다 사회보장지출이 총 공공지출의 35%(2016년 기준)에 달하고 있음.

사회보장지출 유무에 따른 기초재정수지 수준 비교



자료 : OECD, Economic Surveys: Brazil 2018

- 현행 연금제도에서 연금 적자액의 GDP 대비 비중은 2016년 2.4%에서 2017년 2.8%, 2018년 3.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 시 IMF는 연금제도 개혁 없이는 2050년까지 연금지출이 GDP의 30%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이에 정부는 연금수령 최소연령 상향(남성 65세, 여성 62세), 최소 납부기한 연장(15년→20년) 등을 골자로 하는 연금제 개혁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10월에 연방 상원을 최종 통과하였음.
- 브라질 경제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10년 간 최소 8천억 헤알(약 1,970억 달러)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함.

3) 시장은 브라질 중앙은행이 금년 마지막 개최될 통화정책위원회(12월 중순)에서 4.5%로 추가 인하할 것으로 전망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f
경 상 수 지	-54,472	-24,230	-15,015	-21,946	-30,907
경상수지/GDP	-3.0	-1.4	-0.7	-1.2	-1.7
상 품 수 지	17,655	44,635	63,959	53,047	41,619
상 품 수 출	190,077	184,315	218,069	239,537	223,107
상 품 수 입	172,422	139,680	154,109	186,490	181,488
외 환 보 유 액	348,861	356,795	365,445	365,544	353,147
총 외 채	665,101	666,777	667,100	665,800	681,800
총외채잔액/GDP	37.0	37.1	32.5	35.6	36.9
D.S.R.	51.2	50.0	38.6	36.4	38.7

자료: IMF, EIU, OECD

상품수지 흑지 유지 전망, 서비스·소득수지의 대규모 적자로 경상수지는 적자 지속 예상

- 2019년 상품수지는 전년과 동일하게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경기 부진,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아르헨티나 경기침체 등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흑자 폭은 소폭 줄어들 전망임.
- 금년 1~9월 누적 무역흑자액(337.9억 달러)은 전년동기 대비 19.5% 감소함.
- 한편,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 과실송금, 외채원리금 상환 등으로 매년 400억 달러 내외의 소득수지 적자 및 300억 달러를 넘는 서비스수지 적자를 기록함에 따라 경상수지는 적자를 지속 중임.
- 금년에도 GDP 대비 -1.7%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나, 연간 500~60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 규모⁴⁾를 감안 시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임.

4) UNCTAD.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의 FDI 유치국(중남미 전체 유입액의 약 42%)으로, 2018년 FDI 유입액은 612억 달러에 달함.

외채상환능력

풍부한 외환보유고에도 불구하고 외채상환능력 개선 필요

- 브라질은 꾸준한 FDI 유입 등에 힘입어 2018년 말 기준 3,655억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를 보유 (세계 10위)하고 있음. 이는 GDP의 약 20%에 달하는 규모로 풍부한 외환보유고는 외부충격의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음.
- 총외채잔액 규모는 2015년 이후로 6,700억 달러 수준(GDP의 30%대) 유지하고 있으며 단기외채잔액 비중이 비교적 적은 편임(총외채의 10% 내외, 외환보유고의 20% 내외).
- 또한, 공공부채 대부분이 자국통화 표시 채무⁵⁾로 1/3 이상이 중앙은행 소유인 점을 감안 시 부채의 만기연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민간 부문의 달러화 표시 채무는 대부분 환헷지되어 있으므로 환율변동 위험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임(IMF).
- 그러나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이 2016년 50% 수준에서 2017년부터 40% 내외로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외채원리금 상환의 주요 소득원인 경상수입이 대규모 소득지급 및 서비스수입에 따른 경상지출보다 부족함으로 외화 수입원을 감안 시 외채상환능력은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한편,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이 88%(2018년 기준)로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2024년 GDP의 96% 예상, IMF)되는 가운데, 부채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5) IMF는 브라질의 공공부채 중 외화표시채무가 GDP의 4.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2018년 기준).

구조적취약성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는 경쟁력 저하의 최대 요인

- 고율의 세금과 복잡한 세제구조, 높은 금융비용, 관료주의(부정부패)로 대표되는 이른바 브라질 코스트(Brazil Cost)가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브라질의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은 32%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중남미 평균(22%)을 상회하는 것은 물론, OECD 평균(34%)에 근접한 수준임. 연방·주·지방 정부가 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주요 세목만 62가지에 달하며, 이에 따라 중복과세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브라질 금융기관들은 경쟁 부족, 보유자산의 질적 수준 미비 등으로 사실상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며, 실질 대출금리 수준은 기업은 10% 이상, 개인은 30% 수준에 달하는 등 기준금리(현 5.0%)에 비해 금융비용이 매우 높음.
- 세계은행의 2020년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Ease of Doing Business Ranking)에서 브라질은 190개국 중 124위에 그쳤음. 이는 칠레(59위), 멕시코(60위), 콜롬비아(67위), 페루(76위) 등 중남미 주요 국가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특히 건축인허가(170위)와 납세(184위) 부문은 전체 190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함.
- 이에 브라질 정부는 특정 산업 부문의 일시적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해 왔으나, 막대한 재정적자로 인해 번번이 중단되었음.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019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2022년까지 기업경영여건 종합순위 50위권 진입 목표 의지를 밝혔으며, 세제 단순화 및 법인세율 인하 등의 세제 개편, OECD 가입 등을 추진 중으로 점진적인 투자환경 개선이 기대됨.
- 단, 재정적자 규모 감안 시 근시일 내에 대폭적인 개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인프라 미비가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

- 브라질은 세계 9위의 경제규모와 광활한 국토면적, 풍부한 천연자원에도 불구하고 교통, 전력, 수자원 등 인프라 부문 전반이 낙후되어 경제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19년 브라질의 인프라 부문 순위⁶⁾는 141개국 중 78위로, 칠레(42위), 멕시코(54위), 에콰도르(62위), 아르헨티나(68위) 등 여타 중남미 국가들 대비 순위가 낮았음. 특히, 도로 상태(116위)⁷⁾, 항만서비스 효율성(104위), 전력 품질(102위) 등 인프라 질적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보임.
- 이는 지난 20년 간 평균 공공투자가 GDP의 2%에도 미달하는 등 중남미 평균(5.4%)이나 여타 개도국(6.2%)에 비해 정부 부문의 인프라 투자가 현저히 적었던 것에 기인함.
- IMF에 따르면 브라질의 공공 인프라(public capital stock)는 2015년 기준 GDP의 39%에 불과하여, 개도국(88%)이나 여타 BRICs(112%)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음.
- 한편, 연금 등 사회보장지출로 재정적자가 계속되는 가운데, 2016년 말 정부지출 상한법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20년 간 정부지출 증가율이 전년도 물가상승률 이내로 제한됨에 따라, 인프라 부문 현대화를 위한 추가적인 정부 예산 배정이 어려운 상황임.
- 이에 브라질 정부는 국내외 민간자금 유입을 통한 인프라 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인프라 투자 촉진 프로그램(Program for Partnership and Investments)을 추진 중⁸⁾임.
- 특히, 전력 송·배전, 공항, 철도 분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도로가 물류운송의 65%를 차지하는 가운데 '18.5월 발생한 트럭 노조 파업에 따른 물류 대란 후, 대체 운송수단으로 철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져 정부가 '25년까지 철도의 의존 비중을 30%(현재 15%)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임.

성장잠재력

다양하고 풍부한 부존자원 보유

- 브라질은 철광석, 원유, 보크사이트, 망간 등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약 80종에 달하는 광물을 생산하고 있음.
- 대표 부존자원 중 철광석은 매장량·생산량 기준 세계 2위, 원유는 매장량 기준 15위, 생산량 기준 9위, 나이오븀은 매장량·생산량 기준 세계 1위, 보크사이트는 생산량·매장량 기준 4위, 망간은 생산량 기준 5위, 매장량 기준 3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⁶⁾.
- 이외에도 알루미늄, 시멘트, 금, 주석, 탄탈석, 흑연 등의 매장량·생산량도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음.
- 또한, 브라질은 세계 제 4위의 농산물 생산국이며, 국토의 약 23%가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축산업이 발달하였음.
- 주요 품목별 생산량의 전 세계 순위는 커피·오렌지·설탕 1위, 대두 1위 예상(2019), 쇠고기·닭고기 2위, 옥수수 3위 등임.
- 한편, 국토 내 삼림 면적(전 국토의 62%)이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에 달할 만큼 넓고, 수종이 다양하여 임산자원이 풍부함. 2017년 기준 목재 생산량은 세계 7위, 삼림 보유량은 세계 3위로 파악됨.

중남미 최대의 내수시장과 비교적 다변화된 산업구조

- 브라질은 GDP 세계 9위, 인구 규모 세계 5위의 대국으로 거대한 내수시장 수요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국토면적 세계 5위의 대국으로 칠레와 에콰도르를 제외한 남미의 모든 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교역시장 확대에 비교적 유리한 입지조건을 확보하고 있음.
- 2017년 기준 브라질 경제는 서비스업(72.7%), 제조업(20.7%), 농업(6.6%)로 구성되어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다변화되어 있음.
- 농업은 커피, 대두, 밀, 쌀, 옥수수, 사탕수수, 코코아, 쇠고기, 닭고기 등, 제조업은 자동차 및 부품, 철강, 항공, 시멘트, 화학, 제재목, 면직물 등으로 생산품목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음.
- 자동차, 전자, IT, 에너지, 제철, 금융, 제약, 농식품 가공업 등 주요 업종에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여 생산·판매 활동을 영위 중임.

6)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9

7) CIA, The World Factbook. 브라질의 전국 도로 길이는 약 200만 km이나 이 중 포장된 도로는 24.6만 km(12.3%)에 불과.

8) '16~'18년 중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송배전사업 등 124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9년 철도, 공항 등 69개 사업 추가 발표.

9) US Geological Survey. 부존자원은 2018년 기준, 단 원유는 EIA 매장량 2017년, 생산량 2018년 기준

정책성과

11월 연금 개혁안 발효

- 연금 지출은 정부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핵심 원인의 하나로, 전임 테메르 정권부터 연금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정권 혼란(테메르 대통령, 부패혐의로 기소), 연금 개혁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국회의원 등 고위관료와 고소득층에 유리한 현행 연금구조¹⁰⁾ 개혁에 대한 반발 등으로 입법처리가 지연되어 왔음.
- 민간 근로자의 경우, 최소 납입기간(남자 35년, 여자 30년)만 충족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동가능인구의 은퇴 연령¹¹⁾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음.
- IMF에 따르면, 기여금 최소 납입기간 충족시 퇴직 전 임금의 약 70%에 해당하는 만기지급액 수령이 가능한 구조로, 이는 OECD 평균(5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 이에 따라 2018년 연금기금의 수지 불균형은 GDP의 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인구 고령화, 조기은퇴 경향 등 고려 시 수지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금년 초 출범한 보우소나루 정권은 연금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2월 민간 및 공공 부문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한 데 이어 3월 군인연금 개혁안을 제출하였음.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민 간	근로자 (i),(ii) 중 하나 충족 시 연금 수령 가능 (i) 최소 납입기간(남 35년, 여 30년) 충족 (ii) 연금수령 최소연령(남 65세, 여 60세)과 최소 납입기간(남녀 공통 15년) 충족	연금수령 최소연령(남 65세, 여 62세)과 최소 납입기간(남녀 공통 20년) 모두 충족
	농 민 연금수령 최소연령(남 60세, 여 55세)과 농업 종사기간(남녀 공통 15년) 충족	연금수령 최소연령(남녀 공통 60세)과 최소 납입기간(남녀 공통 20년) 모두 충족
	교 사 최소 납입기간(남 30년, 여 25년) 충족	연금수령 최소연령(남녀 공통 60세)과 최소 납입기간(남녀 공통 30년) 모두 충족
공 공	(i),(ii) 중 하나 충족 시 연금 수령 가능 (i) 연금수령 최소연령(남 65세, 여 62세) 충족 (ii) 연금수령 최소연령(남 60세, 여 55세)과 최소 납입기간(남 35년, 여 30년)과, 공무원 재직기간(남녀 공통 10년)과, 마지막 직책 종사기간(남녀 공통 5년) 충족	연금수령 최소연령(남 65세, 여 62세)과 최소 납입기간(남녀 공통 25년)과 공무원 재직기간(남녀 공통 10년)과, 마지막 직책 종사기간(남녀 공통 5년) 모두 충족
	군 인 최소 복무기간(남녀 공통 30년) 충족	최소 복무기간(남녀 공통 35년) 충족

- 연금 개혁안은 노동계 및 야당의 반발에 부딪혀 상반기 중 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7월 10일 하원 1차 투표(찬성 379 : 반대 131), 8월 9일 하원 2차 투표(찬성 370 : 반대 124) 통과에 이어 10월 1일 상원 1차 투표(찬성 56 : 반대 19), 10월 22일 상원 본회의 2차 투표(찬성 60 : 반대 19)까지 무난히 통과하였으며, 동 법안은 11월 12일 발효되었음.
- 단, 상원 헌법사법위원회에서 개혁안 내용이 부분 조정(최저임금 연계 조항 유지 등)됨에 따라, 공공 지출 절감액은 10년 간 약 8,000억 헤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10) 현행 공무원 연금구조는 급여가 많을수록 연금도 많아지는 구조이며, 소득구간에 따라 단일한 비율의 기여금을 납부 (누진제가 아님)하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함.

11) 브라질의 평균 퇴직연령(54세)은 OECD 평균(64세)을 크게 하회

중남미 각국의 반정부 시위 발생에 따라 세제 개혁 추진은 순연 예상

- 브라질 정부는 1990년대부터 세제 단순화 및 조세부담 경감을 위한 세제 개편을 시도하여 왔으나, 국회 및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하였음. 한편, 2016년 의결된 정부지출 상한법은 정부 재정 운용에 한계로 작용하며 세제 개편을 어렵게 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 경영여건 개선, 민간투자 활성화,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브라질 코스트로 꼽히는 세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바, 정부는 차기 최우선 경제개혁 과제로 세제 개편을 추진 중임.
- IMF는 복수의 간접세를 일원화하고, 연방세법과 주정부세법을 조화시키는 한편, 비효율적으로 운용되는 면세조항(면세조항 삭제 시 GDP의 2%에 달하는 재정저축 효과 예상)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 한편, 파울루 게지스 재무장관은 우선 간접세 일원화를 추진키로 하고, i)연방세 중 간접세 3종(COFINS, PIS/PASEP, IPI)을 부가세(VAT)로 일원화하는 방안과, ii)연방세 3종에 주정부의 판매세(ICMS)와 지방정부의 판매세(ISS)까지 통합하여 총 5종의 세금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단, 주정부세나 지방정부세를 통합하는 방안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북부, 북동부 지역 중심)들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 정부는 세제 개혁(안)을 포함한 추가 개혁조치(임금 동결, 공공 부문 일자리 감축, 지방자치단체 축소 등) 최종안을 금년 중 의회에 제출하고 2020년부터 세제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중남미 전역(칠레, 콜롬비아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파 정부의 친시장 개혁에 반발하는 반정부 시위가 브라질로 전이될 것을 우려, 개혁법안의 의회 제출을 잠정적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힘.
- 따라서 중남미 내 반정부 시위 추이 및 확산 정도에 따라 본격적인 세제 개혁의 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공기업 민영화의 단계적 추진

- 브라질 정부는 1990년대 중반 연방정부 소유 공기업을 145개에서 106개까지 감축한 바 있으나, 2003년 좌파 정권 집권 이후 기 민영화한 공기업을 다시 국유화함에 따라 2016년 기준 154개로 다시 늘어났음. 이에 테메르 정권이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여 2018년 말 기준 134개까지 감축하였음.
- 보우소나루 정권은 비효율적 운용¹²⁾으로 정부 재정을 악화시키는 공기업을 민영화하여 정부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부정부패 근절도 도모하고자,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공기업 소유 자산을 매각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 2022년까지 134개 연방정부 소유 공기업을 12개로 줄일 계획이며, 목표대로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약 4,500억 헤알(시장 추산, 정부 추산은 1.3조 헤알)의 총수익이 예상됨.
- 금년 상반기 중에는 국영 석유기업 Petrobras 소유의 비핵심자산이나 공기업 소유 공항, 철도 인프라 매각 작업을 중심으로 약 200억 달러 상당의 수익을 창출하였음.
- 한편, 브라질 정부는 현재까지 국영 우편기업 Correios, 국영 통신기업 Telebras 등 17개 공기업을 민영화 대상으로 발표하였음.
- 단, 연방정부 소유 공기업 민영화 시에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며, 다수의 공기업이 방만하고 낙후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투자유인이 크지 않아 민영화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12) KPMG 보고서에 따르면 브라질 공기업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운영비용을 부담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38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산됨.

정치동향

룰라 전 대통령의 석방 및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탈당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극우 성향의 사회자유당(PSL) 출신으로 치안 안정, 부패 척결 등을 가치로 내세우며 표심을 결집하는 데 성공, 2018년 10월 열린 대통령 결선 투표에서 14년간 장기집권한 좌파 노동자당(PT) 출신 후보를 물리치고 55%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됨.
- 보우소나루 정권의 정치·행정 경험 부족, 약한 지지기반(하원의석의 10%)으로 친시장 정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연금 개혁안의 성공적 의회 통과로 현 정권의 행정능력이 일부 입증되었고, 추가 경제 개혁안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었음.
- 그러나 11월 들어 룰라 전 대통령의 석방 및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사회자유당 탈당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남미 전역의 반정부 시위 등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함.
- 룰라 전 대통령은 11월 8일 석방 후 정치활동을 재개하며 게지스 장관의 경제정책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동시에, 노동자당 재집권을 위해 지지자들과 좌파 진영의 결속을 촉구하고 있음.
- 한편,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내년 지방선거 후보 공천권 등에 대한 루시아노 비바르 사회자유당 총재와의 갈등 등으로 11월 19일 사회자유당 탈당 후 11월 21일 '브라질을 위한 동맹'(Alliance for Brazil, APB) 신당 창당 행사를 진행함. 아울러 2020년 10월 예정된 지방선거를 위해 2020년 3월까지 등록을 마칠 계획임.
- 사회자유당 소속 하원의원의 과반수가 APB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되며, APB는 사회자유당보다 우파 성향이 더 강할 것으로 관측됨.

여러 정당으로 구성된 의회 구조로 정치적 협상력 중요

- 브라질 의회는 상원은 21개 정당, 하원은 30개 정당이 혼재되어 있어 전통적으로 중요 법안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거나, 법안의 중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도 많음.
- 일반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하원 513석 중 25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 연금 개혁과 같은 개헌안은 하원 513석 중 308석 이상, 상원 81석 중 49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 법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좌파 또는 중도 정당과의 연합 내지 강력한 협상력이 요구되나, 제1야당인 노동자당의 룰라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 재개 및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사회자유당 탈당은 현 정권의 의회 내 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관측됨.

<브라질 의회 의석 분포>

상 원			하 원		
정당명	성향	의석수	정당명	성향	의석수
MDB(브라질민주운동)	중도	11	PT(노동자당)	좌파	56
PSDB(브라질사회민주주의당)	중도	7	PSL(사회자유당) 여당	우파	52
DEM(민주당)	우파	7	PP(진보당)	좌파	37
PDT(민주노동당)	좌파	6	MDB(브라질민주운동)	중도	34
PP(진보당)	좌파	6	PSD(사회민주당)	우파	34
PSD(사회민주당)	우파	6	기타	-	300
PT(노동자당)	좌파	6			
기타	-	32			
합 계		81	합 계		513

자료: IHS Markit

사회동향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 척결 필요

- 지난해 대통령 선거의 주된 공약이 부패 척결일 만큼 브라질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정부패는 심각한 이슈이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매우 높은 상황임.
- 국영 석유기업 Petrobras의 뇌물수수 스캔들은 브라질 사회의 정경유착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는 사건이었으며, 이후 연이은 국영 기업·건설사의 공공사업 등을 통한 뇌물수수 비리가 밝혀지면서 2014년에 대대적인 반부패 수사인 라바자투(Lava jato)를 착수, 현재까지 진행 중임.
- 현재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전임 대통령(룰라, 테메르 등), 고위 정치인(60명의 국회의원 등), 기업 경영진(Petrobras, Odebrecht 등) 등이 수감 또는 기소된 상태임.
- 부정부패는 경제성장에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사업 추진에도 수년 간 차질을 주고 있음. 브라질 감사원은 2011년 과도한 공사비 책정과 불공정 경쟁으로 인프라 사업 27건을 중단했으며, 2012년에는 불법 정치자금으로의 전용 및 공무원 뇌물수수 혐의로 건설사 Delta와 체결된 수백 건의 계약이 취소되기도 하였음. 또한, 2014년에는 건설사 간 가격담합이 밝혀지면서 상파울루 주 철도 개·보수 사업 4건 계약이 연기되기도 함.

보우소나루 정권의 강도 높은 친시장정책에 따른 사회불안 가중 우려

- 보우소나루 정권의 연금제도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국영기업 민영화, 건축 정책에 따른 공공서비스(보건·교육) 축소 등 강도 높은 친시장적 개혁에 대한 불만이 노동계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최근 중남미 전역에서 친시장정책 및 신자유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대규모 시위 사태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브라질 내부의 고질적 사회갈등 요인(소득불평등¹³), 부정부패)과 최근 친시장 정책에 대한 브라질 국민들의 불만의 기폭제가 될 우려가 있음.
- 칠레에서는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에콰도르에서는 유류세 인상으로, 콜롬비아에서는 높은 실업률과 치안 불안 등으로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사태가 중남미 전역에 확산되고 있음.
- 한편, 아르헨티나에서는 마크리 전 대통령의 우파정권이 경제회생에 실패함에 따라 금년 10월 정의주의자당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포퓰리즘 좌파 정권이 재집권하게 되어 중남미 국가 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브라질에서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2019년 5~6월 중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연금 개혁 반대 시위가 진행된 바 있음.

13) 브라질 국립통계원(IBGE)의 2019년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1%의 월평균 소득(27,744 헤알)은 하위 50%의 월평균 소득(820 헤알)의 33.8배에 해당하는 등 소득격차는 2012년 공식적 조사 이래 역대 최대 수준임

국제관계

양자협상 중심의 개방경제 정책 지향

- 2019년 10월에 열린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당선된 포퓰리즘 정당 페르난데스 후보의 집권으로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의 두 중심축이었던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갈등이 증가되어 메르코수르가 와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임.
 -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이 1995년 1월 1일부터 무역장벽을 철폐한 비과세 남미 공동시장임. 베네수엘라는 2012년 7월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나 2016년 12월 회원국 지위가 잠정 정지됨.
- 메르코수르와 EU는 2019년 6월 FTA 체결에 합의하였으나, 페르난데스는 자국 산업에 미칠 영향 평가를 이유로 FTA 합의문 수정을 요구함. 이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르헨티나가 FTA 체결을 방해하면 메르코수르에서 아르헨티나를 축출하거나 브라질이 탈퇴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양국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음.
- 시장에서는 브라질 또는 아르헨티나가 메르코수르에서 탈퇴한다는 의미의 '메르코엑시트' 용어가 생길 만큼, 기존 메르코수르 체제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 남미 내 우파(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온두라스, 페루)와 좌파(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국가 간 관계 경색으로 향후 각종 국제적 이슈에 대한 남미 차원의 공동 협력·대응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자국 우선주의 기조와 양자주의 선호 성향을 보이는 보우소나루 정권은 다자협상보다는 양자협상을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브라질 정부는 금년 내 OECD 회원국이 되기를 희망하며 2017년 5월 OECD 가입을 신청하였으나, OECD 가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국의 지지 부재(경쟁국인 아르헨티나, 루마니아 가입만 지지)로 브라질의 금년 내 가입 시도는 사실상 무산되어 2020년 중 가입을 기대 중임.
- 브라질은 OECD 회원국을 목표로 관련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OECD 가입의 대가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도국 차별적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OECD 가입 의지가 높음.

* 현재 중남미의 OECD 회원국은 멕시코(1994년), 칠레(2010년), 콜롬비아(2018년) 3개국임

외채상환태도

양호한 외채상환태도 유지

- OECD 회원국 ECA에 대한 연체액 규모가 작은 편이고, 비교적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외채 상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이런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2019년 6월 말 기준 OECD 회원국 ECA의 브라질에 대한 승인금액 280억 달러(단기 57.0억 달러, 중장기 223.2억 달러) 중 연체액은 약 7억 달러(총 승인금액의 2.5%)에 불과함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5등급(2019.10)	5등급(2018.10)
Moody's	Ba2(2019.05)	Ba2(2018.04)
Fitch	BB-(2019.05)	BB-(2018.02)

가시적인 경제지표 개선이 부재한 상황으로 신용등급 조정 없는 관망세

- Fitch는 연금 개혁법안의 처리 지연과 대선에 불확실성을 사유로 2018년 초 브라질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하향 조정한 이후, 신용등급 조정 없는 관망세를 보임
- 보우소나루 정부의 최우선 과제였던 연금 개혁안의 의회 통과, 기준금리 인하 등 중장기적으로 재정 수지가 개선되고 경기가 활성화될 여지는 있으나, 더딘 경제 회복세,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운 과다한 공공부채, 주요 수출국(중국, 아르헨티나)의 경기 부진으로 인한 수출 감소 우려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 신용등급 상향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브라질 경제는 트럭 운송노동자 파업 여파, 아르헨티나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 등으로 2018년 1.1% 성장에 그쳤음. 2019년에는 연금제 개혁안 통과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 정부의 경기부양책 추진, 기준금리 인하 등에도 상반기 경기 부진(철광석 수출 감소, 연금개혁 불확실성) 여파, 경기회복을 위한 단기 모멘텀 부족 등으로 0.9%의 소폭 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 풍부한 외환보유고(2018년 기준 세계 10위)는 외부충격의 완충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경상수지 적자에 따른 외화 수입원 부족으로 외채상환능력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지속적인 재정적자 및 과도한 공공부채(GDP 대비 88%)를 고려할 때 국가부채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과도한 공공부채와 재정수지 적자는 브라질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정부는 2016년 정부지출 상한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재정긴축 노력으로 2019년 재정적자는 소폭 감소(GDP 대비 7.5%)할 것으로 예상됨. 올해 1월 출범한 보우소나루 정권은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연금제 개혁안을 10월에 의회에서 최종 통과시켰으며, 세제 개편, 국영기업 민영화 등의 추가적인 개혁안을 추진 중임. 단, 연금개혁에 비해 의회 내 지지세력이 많지 않아 개혁 추진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보우소나루 정권은 전 정권과는 달리 친시장,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극우파로 공공지출 축소를 지향하는 바, 소득 불평등으로 국민의 불만이 만연한 가운데 인접국들의 대규모 시위의 여파가 브라질의 사회불안정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음. 한편, 주요 협력국이었던 아르헨티나에서 좌파 페르난데스가 대통령으로 10월 당선된 후 양국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남미 차원의 공동협력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임.